

대학 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슈와 대응방안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김은현



#사례 1

2014년 4월, 미국 오클라호마 주는 중국 설비회사를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경쟁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 했다. 이보다 4개월 전인 2014년 12월, 루이지애나 주는 중국 가전제품 회사에 대해 불법 SW사용을 이유로 '루이지애나 주 내에서의 해당 회사 제품 유통을 금지시킬 것'이라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같은 해 4월 워싱턴 주는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를 상대로 '10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받은 후 3,300대에 설치해 권리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미국내 경쟁사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2010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처음 도입한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 UCA)은 3년새 미 국내 38개 주에서 채택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례 2

2014년 5월, 국회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개정안 제4조제2항제9호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규정으로 대통령 훈령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동 규정은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 외부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 공포를 거쳐 성립되고 행정규칙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 법률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를 처음으로 입법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동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SAM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찾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 등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자산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례 3

2014년 7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부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 있는 부처가 모두 참석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업무 보고가 있었다.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종합 보고서는 그동안 소프트웨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저작권보호 강화, 인재 육성이 대부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대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불법 복제율 0%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위의 세 가지 사례는 2014년 현재 우리 사회의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핵심 이슈들의 단면들을 보여 준다. 각각 저작권과 국제 통상 마찰의 위험성,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관리 방안의 의무화, 그리고 현 정부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사례라 하겠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라는 화두를 풀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성과를 본 적은 없었다. 그 핵심 사유로는 하드웨어 위주의 육성 정책, 일관성

없는 정책,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을 꼽을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중공업 육성 정책이 오랜 식민지와 3년간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극빈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 키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자유로운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성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효한 방법론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임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해마다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표 브랜드인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물음표를 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을 맹렬하게 뒤쫓고 있던 우리를 이제 중국과 인도의 거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앞서 마지막 사례로 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이러한 위기 앞에 범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해법에 다름 아니다.

최고 지성을 길러내는 대학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곳이다. 사람이 알파이자 오메가인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상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배출돼야 산업 육성도 가능하다. 점에서 대학의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인재들이 세상을 놀래킬 소프트웨어 개발에 밤 새는 줄 모르고 열중할 모습이 눈에 선하다. 문제는 이러한 인재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인 대학이 정작 소프트웨어의 존립 기반인 SW 저작권 보호에 만큼은 우리 사회 다른 구성원 집단보다 떨어진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주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내 대학들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현황은 공공 기관이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식 재산의 산실인 대학이 정작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수도권 소재 2개 대학을 상대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수백억 원 대의 라이선스 침해를 입었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대학이 더 이상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있어 안전 지대가 아님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에 다름 아니다.

대학이 주요 저작권사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률이 낮다는 의혹(?)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용자(기관 및 기업)에 비해 SW관리가 허술하고 방만한 데에서 기인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이나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사용 및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미확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실시간 통제하는 자동화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기업과 기관은 관련 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한다. 이를 위한 내부 규정과 지침을 두고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몇몇 사용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주요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맞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에 대한 분석까지 컨설팅 받는 추세다. 이는 불법복제로 인한 고소고발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저작권사의 ‘계약 준수 이행’(Audit) 요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사의 고소고발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앞서 언급한 저작권사의 ‘계약 준수 이행’(Audit) 요구는 급증하고 있다. 3~4년 전만 하더라도 극히 일부 저작권사들이 시

행하던 이같은 방식이 이제는 시장에서 일상화된 상태다.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 준수 이행(Audit)’을 요구하는 저작권사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셈이다.

지성의 전당으로 불리는 대학인 만큼, 저작권사도 대학을 포함한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다른 저작권 정책과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교육용에 한정해서 무료로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사용 금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 사용자와 비교할 때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 내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정확한 개수와 계약 조건들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협회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이슈를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대학 전산 담당자들이 이러한 고충을 토로한다.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보유, 사용 중인 PC가 몇 대인지 모르는 곳도 있다. 보유, 사용하고 있는 PC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 PC에서 보유,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되는지는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통합 전산망과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강력한 통제 정책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기업의 관리 체계를 대학에 그대로 도입한 사례로, 담당자와 책임자를 두고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조직 내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이를 통합 운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마다 규모와 특성이 다른 만큼, 위의 사례를 모든 조직에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러나 라이선스의 보유 현황 및 사용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작권사와 불필요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결국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까지 소요된다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방안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조직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와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사용 실태가 파악되면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관리 방법론은 ISO에서 정한 글로벌 표준까지 제시되어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체계를 도입한다고 해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 기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협회는 사용자의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관리를 돕기 위해 ‘시샘(©SAM)’이라는 이름의 종합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 운영 체계를 세우고 자율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일부 조직만이라도 샘플로 운용한 뒤, 이를 전체 조직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조직 내 의사 결

이슈진단 및 분석

정과정의 복잡한 대학에는 적합할 수 있다.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탄생한 소프트웨어는 이제 IT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분야가 되었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소프트웨어를 잘 아는 이가 많은 조직이 결국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는 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소프트웨어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하는 ‘스마트 컨슈머’들만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대학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마트 컨슈머가 되는 첫걸음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를 매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대하는 자세를 갖는 데에서 출발한다. 구매 계획 단계부터 폐기 단계에 걸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율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일은 조직의 생산성을 배가시키는 물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비용 낭비를 막는다. 대학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슈에 대응하는 첫걸음은 바로 소프트웨어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의 인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필자소개

김은현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국민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미 스탠포드대학교 로스쿨 석사를 취득하였다.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한 국마이크로소프트 기획조정실 상무, BSA코리아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위원으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지식재산 보호와 육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